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0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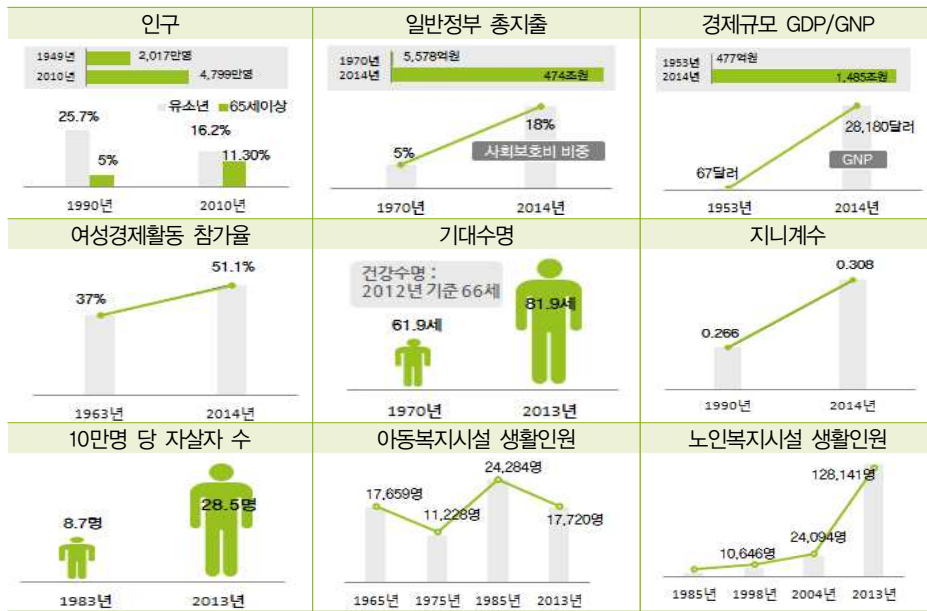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복지의 명암

01 주요 내용

- 통계청은 8월 10일 1945년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을 돌아보기 위해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란 책자를 발간
- 경제는 고속 성장하고, 인구·정부 재정 등 양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복지의 수준과 삶의 질은 양적 성장의 속도를 따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



GDP : 명목
 국내총생산
 GNP : 1인당
 국민 총소득

* 일반정부
 총지출 : 중앙
 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산

* 사회보호
 지출은 일반
 정부의 기능별
 지출 분류(10개)
 의 하나임
 (10대 분류 :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
 개발, 보건,
 오락문화 및
 종교, 교육,
 사회보호)

- 인구 2배 늘었지만 저출산·고령화 가속
 - 1949년 2,017만명(38선 이남)이었던 인구는 2010년 4,799만명으로 증가. 그러나 유소년 비중은 1990년 25.7%에서 2010년 16.2%로 낮아졌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배 이상 높아짐
- 일반정부 총지출은 1970~2010년 사이 850배 증가, 사회보호 지출은 5%에서 18%로 확대됨
-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에서 2013년 81.9세로 43년간 20세 증가했으나, 건강의 질을 고려한 건강수명은 2012년 66세로 기대수명과 15년가량 차이가 남
-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4년 0.308로 악화
-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3년 인구 10만명당 28.5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복지시설 생활인원 중 아동 수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노인 수는 2000년대 후반 급증함. 자녀의 부모부양의식은 약화되고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 책임이 강화된 사회상을 반영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시행 '15.7.29.

01 주요 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을 의무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의미

BF 인증제 :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하는 제도

※ 인증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전체), 한국장애인개발원(건축물, 공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건축물 중 장애인고용사업장)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장애인자동차표지' 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로 명칭을 바꾸고,
 -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보행 장애인의 보호자, 재외동포 및 외국인(보행상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복지사업 등을 하는 법인·단체와 시설 등에게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시 회수 및 재발급을 제한(최대 2년)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마련

주차방해 행위(과태료 5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과태료 인상 등은 향후 하위 법령 개정 시 검토 예정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이동권 기회 확대 등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됨
 - 경기도는 8월 21까지 시·군,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및 공공건물 등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집중점검 이후에도 보행상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
 - 경기도 내 BF 인증 건축물은 총 38개로 전체 564개의 6.7%이며, 38개 중 민간시설은 16%인 6개소에 불과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주나 시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확대방안 마련이 필요함
 - 취득세 경감,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 각종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 지자체 홍보매체에 게재 등의 인센티브 부여 등
- ※ 현재 전라남도 등 4곳의 지자체에서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광주광역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 조례' 를 제정·시행'14. 1. 1.) 중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
<http://bf.koddi.or.kr>.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각 지자체들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건강도시, 고령친화도시, 안전도시, 생태도시, 인문학도시 등을 표방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 이를 연속적으로 소개하고자 함

1. 건강도시

- 1996년 과천시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 4개 도시(서울, 원주, 창원, 부산 진구)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합(AFHC)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2009년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가 창립되었음
-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는 총 76개이며,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광명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성시, 양평군, 용인시, 의왕시, 화성시 등 7개 시가 참여하고 있음
- 건강도시들은 건강 개발 계획 수립, 지표개발, 인프라 구축, 거버넌스 형성 등을 추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강좌, 금연, 절주, 비만예방관리, 걷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 건강도시 사업 : 의왕시 사례

인프라 구축 : 조직개발, 스킴존·실버존 설치운영, Walking Map 작성, 도로정비/자전거 도로 생활터 접근 : 건강증진학교, 학교폭력 예방, 아토피 친화학교, 건강한 직장, 건강식당 인증제 등 **생활양식 개선 및 건강증진** : 금연교육, 절주 캠페인, 아침먹기 생활화,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환경관리** : 경관조성, 쓰레기 관리, 소음관리, 수질관리, 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체험학습 **질병예방** : 건강검진

- 건강도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음
- WHO 건강도시지표(9개 영역)

지표 구분	세부 내용
인구	인구밀도, 성별연령별 인구수, 노인인구비율, 인구 동태, 총부양비 등
건강상태	출생 및 사망 등 행정 통계, 암 등 주요 질병의 사망률, 주요 질환의 유병률, 주관적 건강상태 등
생활양식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등
주거환경	주거안정성 : 주택보급률, 주택밀집도 및 주거 만족도 등 생활기반시설 :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에 관한 사항
사회경제적 여건	경제활동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비율, 실업률, 산업별 인구구성 등 교육 : 교육수준, 인구대비 학교 수, 학생수 등 안전 : 범죄 및 사고 발생, 문화 : 문화시설 및 이용관련
물리적 환경	공원 및 녹지 등 자연생태, 대기오염도 현황과 개선, 수질오염도 현황과 개선, 상·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 현황, 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현황, 지역에 따른 환경소음도
불평등	소득형평지표 : 지역별 소득분포, 취약계층 건강지원 현황
물리적 및 사회적 하부구조	도로 및 보행환경 : 도로, 도로시설물, 보행시설 현황 공공 운송 :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통신수단 : 인터넷 보급률, 도시개발 : 재개발, 도시개발계획
공중보건정책 및 서비스	보건의료체계 : 보건의료 이용도, 시설현황, 인적자원 사회복지시설 : 유형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공공보건사업 : 각종 보건사업 현황 등

03 FACT CHECK

제 각각이던 복지급여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통일되나?

- 2012년~2013년 정부부처의 300여개 사업의 급여기준선은 제각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활용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하반기부터 긴급복지 등 각종 제도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경기도의 무한돌봄사업, 각종 지역투자바우처 사업 등 자체사업의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
- 복지급여 관련 소득 기준

기준	정의	활용 제도	수준
최저임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15년 기준 시급 5,580원
최저생계비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 의미하며 필요한 물건을 직접 시장바구니에 담아 비용 추계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무한돌봄사업, 차상위 양육지원, 한부모지원사업 등	'15년 4인 가구 기준 166.8만원
소득인정액	실제 수입뿐만 아니라 재산을 일정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	기초연금	'15년 4인 가구 기준 211만원
기준 중위소득	급여기준에 활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위소득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4인 가구 기준 422만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전국가구의 소득의 합을 전국가구수로 나눈 평균값. 소득격차가 심한 경우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을 수 있음	아이돌보미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5년 4인 가구 기준 497만 4천원

* 중위소득은 전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

04 통계로 보는 복지

아동 학대

유형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학대 유형별 피해자 연령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자료 :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최근 발간한 보건복지부의 보고서¹⁾에 의하면 2014년 발생한 아동학대는 총 1만27건이며, 중폭학대가 4,814건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방임(1,870건), 정서학대(1,582건) 순임
- 연령대별로는 13~15세의 아동에 대한 학대가 3,698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아동학대는 81.8%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친인척이 5.6%, 보육교직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9.9%임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에 관련 사항 개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14.2.28.)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늘었으나,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가해자 엄중처벌, 유관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 등이 요구됨

1)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